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Ⅰ. 序 : 김기춘 등의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정치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어학사전에 나오는 문언 그대로를 해석하면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정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프로세스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성향이나 동향 등을 몰래 파악하는 사찰(査察)이나 정치적 공격이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몰래 일을 꾸미는 공작(工作)은 법치주의 행정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30여년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러한 독재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는 사라진 유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한 업무일지¹⁾를 통하여 유신독재정권에서 공작정치를 담당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찰과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검찰수사, 세무조사, 정부 지원 차단, 공연이나 전시(展示) 배제 등의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한 업무일지는 청와대 수석회의가 국정에 대한 점검과 대통령 보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 민변 등에 대한 탄압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하는 공작정치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사찰을 하고, 공적인 행정조직과 심지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정치인, 민변, 시민단체를 공격했다. 심지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내·외부인을 통해 몰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라서는 문체부와 경찰, 검찰 등 행정조직과 더 나아가 사법부 재판 등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오염되거나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권력에 굴종하여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사법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언론, 인터넷, 종교

1) 이 글에서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長)의 지시나 명령(命)을 메모한 업무수첩을 “김영한 업무일지”라 한다.

계, 문화계, 교육계 등 분야별로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타난 간략한 메모의 내용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일어난 사실, 결과 등과 연결하여 청와대의 사찰과 공작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청와대 공작정치 주요사례 20가지

1. 법조계에 대한 사찰·공작정치

① 법원 길들이기와 병행된 청와대와 사법부간 은밀한 소통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제도를 통해 법원행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법원의 ‘숙원사업’ 이행을 고리로 법원을 길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안보 도그마를 통해 법원의 시국사건 재판에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국가적 행사 때마다 법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집시법위반 사건,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공안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려 한 것이다.

또한 위 업무일지 상 기재내용에는 청와대가 법원 지도층과 직접 접촉하여 현안문제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도 들어있어, 만일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게 한다.

② 대한변협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0. 11.	“長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요구됨”
10. 14.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대한변협 선거에서 ‘건전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민변 회원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직접 지휘한 상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9. 11.	“장경옥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변 정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를 위해 법무부에 징계를 하도록 공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명령하여 11. 5. 서울지방법검찰청이 대한변협에 장경옥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였다가 대한변협이 장경옥, 김인숙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문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 개시결정을 하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징계에 나섰다.

2.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사찰·공작정치

④ 선고기일 사전인지 상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0. 4.	“長-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선고”

위 기재에 따르면,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이 연내에 선고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아직 마치지 않았고, 핵심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가 언제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고기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2014년 10월 4

일 이전에 박한철 소장을 만나 선고기일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서는 선고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은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했고 12월 17일이 되어서야 이틀 후에 선고하겠다고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⑤ 선고내용 사전인지 정확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2. 17.	‘月(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금일 중,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에게 이틀 후인 2014년 12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5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무렵 정당해산과 비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사이버 사찰 · 공작정치

⑥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소문 과잉대응 정확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9. 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

9월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한 검찰이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다. 검찰 사이버전담팀은 11월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헐담' 유포한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이 업무일지의 공개로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이 인터넷에 많아지자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고,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9월 18일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판 게시물을 ‘적폐’로 보는 청와대 지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⑦ 다음카카오 사찰 및 임원 수사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1. 12.	다음 카카오 동향
11. 14.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 - 통계수치 발표계(획). -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항 (10만원 이하)
11. 20.	VIP 압수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카카오톡은 감청 논란에 대해 10월 8일 공식사과와 해명을 발표하고 10월 13일 이석우 대표가 감청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는 10월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여 “감청영장 협조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검찰은 11월 4일,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위한 연구TF팀을 설치하고 11월 12일,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12월,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와 이듬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달아 검경에 소환되었으며 이듬해 2015년 10월,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편법적으로 재개하였다. 감청을 거부한 카카오 수뇌부에 대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4. 종교인 · 민간인 관련 사찰 · 공작정치

⑧ 종교인 사찰 현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으로,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충격적이다. 스스로도 위법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일로 청와대가 개입할 지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의 약점을 수집하여 겁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6국 국장급’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데, 업무일지의 다른 부분에서 6국 국장은 국정원 추 모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국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이며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다.

⑨ 일반 시민 사찰 현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0. 9.	<장> 미시USA-노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 법무부 출입국 당국-국정원 연계
10. 17.	미시 USA 관련 회의 -> 보안관

‘미시 USA’는 지난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커뮤니티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

기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곳이다(증제6호증 스페셜경제 2016. 12. 12.자 기사). 위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위 내용에 등장하는 ‘노길남’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업무에 동원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⑩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종교단체 압박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1. 22.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요
11. 25.	<장> 조계사 - 황선 장소제공 - 개입조사후 조치(자승)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는 11월 19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이후 전국 순회. 11월 21일 <문화일보> 보도 직후 청와대가 콘서트 장소를 제공한 조계사 압박 방안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북 경험을 나누는 행사 장소를 대관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압박했다면 청와대의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5. 세월호 관련 사찰·공작정치

⑪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우파 시민단체 동원시도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7. 13.	長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 強”, 확고한 신념을 가져. 대통령. 북 응원단 구미호 경계.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시민단체

7월 12일에 있었던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 순회 보고대회” 직후 작성된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좌익’들이 국가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듯한 내용이다. 청와대가 우파지식인이나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세월

호특별법 제정을 막고자 했던 의도가 드러났다.

이후 특검의 수사에 의해 조운선 당시 정무수석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⑫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8. 29.	<p style="text-align: center;">김영오 사찰 의혹</p> <p style="text-align: center;">1.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사찰 2.정읍에서의 개인정보등사찰</p> <p>1.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IO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p> <p>2.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 학교x, 명절에만. 6급이 정읍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p> <p style="text-align: center;">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p>

이보라 의사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과 관련하여, 업무일지에는 ‘동대문구 담당 IO’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Intelligence Officer(정보요원)의 약자로 보이는 바, 국정원 직원이 이보라 의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오 어머니 불법 사찰 정황과 관련해서는 업무일지에 6급(부면장으로 추정됨) 공무원이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읍시장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면장이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김영오의 신상을 질문하였다면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보라 의사의 경우와 같이 국정원이 김영오의 주변 인물들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정원

이 개입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쉽게 거두기 어렵다.

6. 문화예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⑬ 최순실의 문체부 장악을 위한 김종덕 교수 문체부 장관 임명 의혹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8. 3.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일지의 지시가 있었던 시점에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추천으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2014. 10.경 문체부 내 이른바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이 사표를 내고(이 중 3명 수리), 2014. 11.경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이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되고, 2015. 4.경에는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에 임명되는 등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등장으로 문체부에 이른바 ‘최순실 라인’이 문체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최순실은 이른바 ‘국가 이미지 통합’ 등의 사업으로 문화계 예산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10. 2.	“長)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다이빙벨, 파주, 김현”

홍성담, 다이빙벨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2014. 8.경 광주비엔날레가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를 유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 문체부 및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수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7. 전교조 관련 사찰 · 공작정치

⑮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6.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조-고용부에 조치토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OECD에 외무부 통하여 취지 전달토록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 고수토록 독려 - 전교조 투쟁 일정 : 6/27(금) 상경투쟁, 7/12(토) 전국교사대회 장(長) ○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청와대가 수시로 전교조 관련 동향파악을 파악하여 직접 청와대 지시로 대처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半合法, 非合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단 외에도 반합법(?), 비합법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법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전교조에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탄압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⑯ 청와대 ‘2대 과제’로 전교조 탄압을 추진한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6.2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長) ○ 장관 - 전교조 비노조 통보 - 비노조 가처분실요 - 불법집단 행동

	○ 2대 과제 ① 민노총, 민노당 ② 전교조
--	-----------------------------

청와대가 전교조를 ‘주요 국정 과제’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교조와 함께 거론된 민노총, 민노당 등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단체들이 함께 거론된 것으로 보아, 이들을 탄압하려는 것이 ‘주요 국정 과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⑰ 정체불명의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전교조 대응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9.20.(토)~21.(일)	9.20.(토) 장(長) ○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 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합헌 9.21.(일) 장(長) ○ 전교조 - 공대협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위 결정 다음 날, 즉시 항고하여 인용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유도를 구상했다. 또한 전교조 죽이기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공안대책협의회’라는 정체불명의 월권적인 기구까지 만들어지는 등 정보기관과 극우세력이 은밀하게 협잡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⑱ 보수단체 동원하여 전교조 반대 탄원서 조직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9.24.(수)	장(長) ○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 ○ 현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장(長) ○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 통합. DJ 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전교조 범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보도단체의 탄원서가 2014. 9. 30.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또한 전교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현재의 결정에 모종의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한다.

8. 언론계 관련 사찰·공작정치

⑬ KBS 방송 개입 현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6. 17.	KBS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 -공영방송 영,독,일. -수용 곤란 *사추위(김인규사장)-여야 ?분 방통위원장과 ?? 방통심의위원장 경태파(???) -부위원장 인?-?? 김성묵으로 합의.
7. 3.	KBS 6명 - 조대현 7
7. 4.	장. KBS 이사 우파 이사 -성향 확인 요약

공영방송 KBS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현황은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무려 17건 등장한다. 일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은 세월호 참사 직후로 KBS 보도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 방문과 김시곤 보도국장의 청와대 보도개입 폭로가 있던 시기였다. 2014년 6월 10일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고 KBS는 이사회는 새 이사를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길환영 사장 해임 후 일주일 뒤인 6월 16일자 일지에는 “KBS 상황을 파악, plan 작성”이라는 메모가 적혀있고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작성하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6월 17일 기록에는 KBS노조와 16개 직능단체가 바로 전날 제안했던 사장추천위원회가 언급되어있고, 이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메모가 나오는데, 사장추천위원회의 제안이 KBS이사회에서 거부된 것이 청와대의 지시로 추정할

수박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다.

결정적인 내용은 7월 4일 “KBS 우파이사-성향확인 요”라는 대목이다. 당시 KBS 사장의 후보 중 조대현씨가 예상과 달리 여당추천 이사의 동의로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당추천 이사를 “우파이사”로 부르며 이들 중 야당추천 이사에 동조한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지시로 파악된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나 야당 쪽 이사를 ‘좌파’로 인식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⑳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사저널/일요신문에 대한 보복지시 정황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7. 15.	령(領) 2. 특정언론에 보안누설. 인사.정책 누설 내부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 교육, 보안 장치 -> 기강해이 단적인 증거, 현혹 신뢰 -> 상시감찰체계구축 3. 시사저널, 일요신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7. 17.	만만회 고발 트위터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2014년 상반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희)가 비선실세라 공개하며 파문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언론보도로 확대되자 청와대에서는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 대응”이라는 지시가 있었음이 7월 15일자 업무일지 메모로 확인되었다. 청와대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 등을 통해 언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언론이 비판 보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하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비판언론에 대해 응징 등의 표현을 쓰며 기자의 국외 추방, 세무조사 등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Ⅲ.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의 필요성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원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니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서 드러난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사찰과 공작을 지휘한 김기춘과 우병우 개인의 비리와 전횡의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에 가담하거나 방임한 청와대의 두 핵심인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 검찰, 언론 등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인터넷이나 집회, 단체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는데 국가의 입법,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야기된 위와 같은 맹목적 충성과 파벌문화, 비합리적인 행정,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고착화 등 국정원 전반적인 문제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정안정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퇴진 차원에서 탄핵과 퇴진 정국의 문제를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하거나 방치한 관련자들과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유산으로 파묻었어야 할 공작정치 등 헌정유린 행위를 척결하여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행위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조선시대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와 같은 민정수석 등의 견제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합리적인 행정도 사라져 비정상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글 등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고 형사처벌을 시도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사퇴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드러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고발이나 사퇴 압력 등을 시도하였다. 이념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지지·엄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수 변호사단체를 육성하고 대한변협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치 전제군주제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공격하여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고, 때로는 집요한 길들이기도 시도하였다.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권력을 견제하여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는 삼권분립의 원리나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훼손되고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언론의 비판이나 국민의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견제하도록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었다. 민주공화제의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마치 전제적 정치형태가 나타났다.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문체부에서 보수정권과 성향을 달리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이 정권에 충성하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어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행정내부에서 작동하지 못하였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현상이 만연되었다. CJ 그룹의 이미경 이사의 퇴진이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

림픽 위원장 퇴진 등의 사례와 같이 정권실세들에게 잘못 보여(?) 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정권실세인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삼성그룹과 같이 정권실세에 유착하려는 자들이 생겼다. 문체부의 인사에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가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익편취에 협조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을 좌천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에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을 장·차관에 진출시키는 현상을 보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충성문화와 줄서기 문화가 뿌리내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정국운영 전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에 과별이 생기고, 이와 같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선실세 등이 국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입는 자들이 행정기관 내부나 심지어 기업경영에까지 나타나게 되자 충성문화, 줄서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공적인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가 희미해지고 위법·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행정문화가 나타났다.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법률위반의 정황

먼저, 문화계 사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위 임직원들을 통하여, 혹은 우회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홍성담 작가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홍성담 작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2014. 09. 초순경 세월호 생존자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보였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상영되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없도록 그 상영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미리 준비했던 대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영화제의 문제점을 성토히게 하였고, 서병수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합법을 가장한 보복조치로서 부산시와 감사원을 통해 위 이용관을 끝내 사퇴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다이빙벨 배급사인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까지 지시함으로써 그 상영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국고지원 관련 결정 등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갖는 권한을 바탕으로 위 이용관의 의사를 제압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집행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용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이빙벨의 감독 이상호 기자의 표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리

고 김기춘 비설실장 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문화계 좌파인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명단에 적힌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차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내업무에 대해서는 대테러 업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정원이 업무를 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사찰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경찰과 국정원 합동 TF가 소위 우병우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지원자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파성향자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종교계나 대한변협 등의 선거에 개입하여 청와대에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공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 국회의 청문회의 필요성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자로 찍혀서(?)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은 다양하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직접 탄압을 하거나 관련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자주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기금운용이나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서 문제점을 파헤쳐 공격거리 찾고 법무와 검찰행정을 통한 수사나 징계로 괴롭히려 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을 시도하고 정당해산 재판의 진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민변 탄압 등 지시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등 나서서 공작을 하는 정치행태를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재벌)에 취약하고 청와대와의 지나친 교감 속에 정치적 고려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찰도 지금까지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의 개혁도 필요하다. 촛불민심을 촉발시킨 언론의 역할을 역으로 비추어 보면 그 동안 정윤희 문건과동 등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밝히는 등 정치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의 비판역할이 소홀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의 청문회가 필요하다. 특검에서 업무일지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건이 없다. 또한 활동기간이 제한적인 특검에 업무일지의 내용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국회의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만이 업무일지에 기록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정농단을 기획한 당시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는 물론, 국정농단의 피해자·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규명활동이 필요하다.

청와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단체나 개인들이 각 분야별로 공작정치의 실체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회의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끝.

청와대 공작정치 청문회 증인, 참고인 리스트

1. 증인

성명(직위(2014년기준))	관련 영역	관련 사건	비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통	청와대 공작정치 전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법조계	청와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관여 의혹	
이헌 (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대표)		청와대의 보수 변호사단체 통합 관여 의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청와대의 양창수 前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 관여 의혹	
법무부 변호사징계업무 담당자		청와대의 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신청과정 관여 의혹	
법무부 마을변호사업무 담당자		청와대의 마을변호사업무 관여 의혹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TF 구성원		청와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관여 의혹	
검찰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 팀 담당자		사이버	검찰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 관련 의혹
네이버 검색어 조치 담당자	대통령 험담 검색어 조치 관련 의혹		
네이버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요청 담당자			
다음카카오 검색어 조치 담당자			
다음카카오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요청 담당자			
고양시 관련사건 담당자	민간인사찰	아시안게임 인공기 사건	
미시 USA사건 담당자		미시 USA회원 입국방해 의혹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대관 담당자	종교인사찰	조계종 사찰 의혹	
조계종 종단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대응 담당자			
동대문구 담당 국정원 조정관(IO)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동대문 경찰서 동부병원 담당 정보과 직원 및 정보과장			
정읍시 이평면 부면장 추정 공무원			
정읍시 국정원 조정관			
정읍경찰서 이평면 담당 정보과 직원 및 당시 정보과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및 교문수석실 관계자			
송수근 (현 문체부 제1차관, 전 문체부 건전콘텐츠TF팀 간사)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전 문체부 건전콘텐츠TF팀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담당 전·현직 공무원			
국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담당 정보관(IO)		국정원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조직적 관여 의혹	
김세훈 (현 영진위 위원장)		진보 성향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에 대한 지원 및 투자 배제 의혹	
박계배 (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와 국정원에 넘겼다는 의혹	
박명진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참고인

성명(직위)	관련 영역	관련 사건	비고
장경욱 (법무부 징계개시신청 피신청인)	법조계	청와대의 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신청과정 관여 의혹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청와대의 대한변협 운영 관여 의혹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		대법원장등 고위 법관 사찰 의혹	
위철환(전 대한변협 회장)		청와대의 변협 운영 관여 의혹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이버	검찰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 관련 의혹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			
미시 USA 사건 당사자	민간인사찰	미시 USA회원 입국방해 의혹	
사건 당사자의 담임교사		아시안게임 인공기 사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종교인사찰	신부 사찰 의혹	
김영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보라 (김영오씨 담당 주치의)			
동부병원 병원장			
어버이연합 관계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	

심재찬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정원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조직적 관여 의혹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현직 직원			
영화진흥위원회 전·현직 직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현직 직원			
서병수(현 부산광역시장)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다이빙벨> 상영 취소 압박 및 감사,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	
윤장현(현 광주시장)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수정 압박 및 전시 무산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달' 대표 및 직원	국정원이 '시네마달' 직원들의 휴대폰 감청 등의 불법사찰 행위 의혹		

(끝)

